

8 기획



우리학교 총여학생회는 2017년 이후 궐위 상태를 이어오던 끝에 9월 28일 '총여학생회 총투표'에 의해 해산되었다.

(사진=이현정 기자)

총여학생회 해산 87년 이후 34년만 대안기구 논의 부족

문하령 기자 moonbym@kn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n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에 이어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도 총여학생회(총여)가 해산됐다. 오랜 진통과 갈등 끝에 해산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이유와 대안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총여가 왜 상당한 기간 궐위 상태에 있었고 결국 해산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곧 이후의 대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에 우리학교 총여의 변천과 해산에 따른 문제, 그에 대한 대안 등을 전문가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토대로 짚어보았다.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총여가 설립된 시기는 1987년이다. 당시는 서울지역 대학에서 총여학생회의 설립이 가장 활발하던 시기였다. 같은 해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구성되고, 취업 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의

준다. 총여 해산에 앞서 총학생회(총학)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토론자들은 대체로 해산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가장 많이 거론한 이유는 “앞으로 총여가 궐위 상태를 해소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었다.

문화대 성평등위원회(성평등위) '다림'의 위원장 곽재은(국어국문학 2019) 씨는 “총여는 ‘페미니즘 기구’라거나, ‘더 이상 대학사회 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이유로 존재 자체가 문제 삼아져 비난을 무릅쓰고 총여로서 쉽게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치기구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이 줄어든 것 역시 대학가 전반에서 관련 기구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은하 교수는 “총여가 대학가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유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고, 복지 위주의 사업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지층을 잃은 이유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총학이 개최한 1, 2차 간담회에서 토론자들은 대체로 해산에 동의하면서도 그 공백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성차별과 성폭력을 포함해 성평등 관련 의제를 다루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도 사회학과 정교운 교수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 내는 것을 주저하거나 경쟁적

과정, 정치화 과정 등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한 ‘2019 대학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에서 접수하고 처리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2016년 245건, 2017년 368건, 2018년엔 55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대학가에서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학생들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총여학생회가 있어 왔다. 곽 위원장은 총여 해산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만들고, 그에 따른 사건 해결 역량과 경험을 갖춘 대표자들이 존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동체적 책임을 환기할 방법에 대해 고민할 기구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단과대에서는 이미 성평등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총여의 공백을 절감하게 한다. 간담회에서도 “성평등위가 존재하는 단과대도 있지만, 타 단과대와 서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며 “이를 연결할 수 있는 중앙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곽 위원장은 “문화대학, 한의과대학에 성평등위가 존재하지만 총여와는 활동 범위가 다르고, 페미니즘 학회 등 여여성주의 단체들과 총여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며 “총여는 성폭력

대응뿐 아니라 여러 젠더 의제를 학내로 가져 오고, 더 나은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서울캠 중운위는 “2021년 안에 대안 기구를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은 “총여의 해산 논의는 총여가 해온 역할의 부정이 아니며, 투표 결과에 따라 인권위원회(인권위) 혹은 성평등위의 신설이 논의될 수 있다”며 “해당 기구를 총학신하의 기구로 신설할 것인지, 자치권을 가진 독자 기구로 설립할 것인지 또한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캠 총학은 인권위의 신설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남 회장은 간담회에서 “인권위가 신설되어 다양한 인권 의제들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의 문제와 군 인권문제, 장애 인권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인권센터 신설과 함께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총여가 대변하지 못한 대학 내 인권의제도 같이 발굴할 수 있는 단체”라는 구상도 밝혀 2022년 설립될 인권센터와의 공조도 염두에 두었다. 간담회에 참가한 일부 토론자들 역시 “교차적이고 다변화된 정체성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체성만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닌, 경희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인권위 같은 포괄적 기구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곽 위원장은 “인권위의 필요성에는 공감 하지만 총여의 대안 기구는 총여의 역할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는 학생자치기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한 역할이 총학을 견제하는 역할로도 이어질 수 있어야 하기에 대안 기구는 성평등위로, 총학과는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표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를 새로운 움직임으로 보고 다른 형태의 단체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연세대학교의 마지막 총여학생회장이었던 이민선 씨는 <여성 이론>에 발표한 글을 통해 “조그마한 소모임으로부터 시작해도 좋고, 다양한 의제들이 한 곳에 고여 맴돌게 하는 것보다 가볍게 작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상적인 의제 발굴과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논의를 꺼냈다.